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가 불러온 역차별



김경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전문 3억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중소기업청이 별도 지정한 중소기업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육성 측면의 순기능이 있지만 중소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역차별 정책이자 중소전문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22일 2016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예고했다. 예고내용을 보면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자재는 123개에서 133개 품목으로 오히려 늘었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에서도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꺾등으로 듣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기계설비공사 관련 자재도 많아 우리 협회에서는 그동안 고무발포단열재, 밸브, PVC관이라도 공사용자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관계기관에 줄곧 요구했다. 고무발포단열재, 밸브 및 PVC관은 배관의 종류와 두께 등에 따라 품목별로 수백개의 규격이 존재하여 자재관리가 매우 어렵고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반품 및 수령에 따른 관리비 발생 등 관급자재로는 가장 비효율적인 품목이다. 더욱이 납기지연이나 품질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업체는 구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품질개선이나 납품업체 교체 등 즉각

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이는 공사지연이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고무발포단열재는 민간건설사에서는 소모성 자재로 분류돼 지급자재 품목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고무발포단열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었다. 우선 경쟁제품 지정 요건인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요건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입찰이 아닌 1~2개 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청 등에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협회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6일 개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플로어 발언을 통해서도 고무발포단열재 지정 취소를 강력히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에 고무발포단열재가 버젓이 포함된 것이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공사용자재 지정추천 신청 중소기업의 요건이 불확실한데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추천요건)에는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다만,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이어

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기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공사용 자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이 추천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고무발포단열재는 2009년 공사용자재로 처음 지정될 때부터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심지어 작년에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업장장을 상대로 ‘고무발포단열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우리협회도 중소기업청에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중기중앙회가 우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4년 8월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 확인증명업체 실태조사를 실시, 직접 생산하지 않는 3개사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업계의 민원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조치로 문제가 많은 고무발포단열재의 공사용자재 지정이 취소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아직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고무발포단열재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또다시 신청 되어 지정추천이 예고된 것이다. 더구나 소관 중앙행정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까지 등에 업고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본연의 업무인 고용과 노동관련 분야가 아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정책의 실효성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지정추천을 신청한 업체들은 작년에 실태조사 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취소 처분된 회사가 포함되었는가 하면, 우리협회 조사 결과 몇몇 업체는 직접생산능력조차 의심되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의심 회사들은 한마디로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수를 채우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우리협회는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 시 관련업계 전문가 참여를 적극 건의했지만 직접생산 의심업체의 실태조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자재는 하나하나가 건축물의 성능과 하자에 영향을 끼치므로 최소한 KS 인증 자재를 사용해야 마땅하나 미인증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공품질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청은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무발포단열재 관급시장은 1~2개 업체의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용자재 지정이 곤란하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2014년 고무발포단열재 관급물품 계약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90%를, 나머지 1~2개 업체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용자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어야 한다. 그런데 고무발포단열재는 2009년 처음 공사용자재 지정 시 ‘환경부장관’ 추천으로 신청하여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에 제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당시 참여한 직접생산 중소기업은 2개사 뿐이었고 그 중 1개사는 현재 고무발포단열재 관급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이며, 나머지 1개사는 제품 생산여부가 불투명 했다 한다. 사실상 고무발포단열재 관급시장의 독과점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 후 2012년 두 번째 지정추천 때도 그렇고, 이번 2016년 지정추천 때도 유독 고무발포단열재만 ‘직접생산 추천요건을 10개에서 5개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여 지정추천토록 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건설경제신문 10월 2일자 논현마당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